



박근혜 정부의 기만적 안전대책에 맞서자 답은 하나, 이윤보다 안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이제 200일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책임자 처벌도, 원인 규명도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 이들이 건드리지 않은 참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위험한 운항을 용인했나

유병언 일가가 상식에 어긋나는 선사 운영을 한 이유는 구원파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충분히 용인될만하다고 생각했기에 위험한 운항을 계속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이 이들에게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도록 만드는 신호가 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 신호는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진행된 일련의 규제완화다. 해운조합이 오랫동안 강력히 주장해 온 선령제한을 비롯하여 안전검사 기준 전반이 완화되었다. 2009년 12월에는 선장뿐 아니라 선주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범조항이었던 선박소유주 양벌규정이 완화되

어 선주가 사고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업무, 뒷전으로 두다못해 민영화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 해경은 최소한의 규율도 없이 VTS업무를 했고, 사고해역에 배치되어야 할 중형함은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었다. 해경이 구조업무보다 중국어선 단속을 우선시 해 온 이유는 정부부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성과주의 때문이다. 성과가 확인한 불법 어선 단속에 비해 수치화하기 어려운 안전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더욱 핵심적인 문제는 해난구조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는 점이다. 현행 수난구조법(2012년 개정)에 따르면 사고 책임 선주는 사고 초기에 직접 구난구조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선주가 짝값에 구난업체를 찾으려 하거나, 이번 세월호 참사 때처럼 해경간부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

를 소개시켜주게 된다. 어느 쪽이든 구난능력이 우선시될 수는 없다. 대형참사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조업무마저 시장의 논리에 맡기고 있다.

사고대처가 불가능한 선원들

선장과 선원들은 제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선원들을 또 만들어내는 구조가 남아있다면?

청해진 해운은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 비상훈련은 열흘마다, 비상조타훈련은 3개월마다, 선체 손상 대처훈련과 인명사고 시 행동요령은 6개월마다 실시해야 했다. 그러나 이런 훈련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더라도 계약직 선장과 4~12개월짜리 단기 계약직 선원들로 구성된 팀에서 훈련이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다.

한국 내항 여객선 선원의 75%는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고용구조 하에서는 훈련이 무의미하고, 선원들에게 책임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고용구조 문제도 주요한 구조적 원인으로 다뤄져야 한다.

안전을 시장에 내맡기지 마라!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안전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돈벌이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안전대책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는 다시 이윤 앞에 안전이 희생될 뿐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규제 완화, 안전업무의 민영화라는 정책기조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안전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셋째, 기업이 위험한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안전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이 위험작업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10월 17일에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풍구가 죽음의 낭떠러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충분했다.

또 드러난 부실 안전 대책

첫 번째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환풍구의 부실한 안전기준이다. 1제곱미터 당 100킬로그램의 무게를 견디도록 되어있는 기준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환풍구 둘레 안전펜스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환풍구 높이도 문제다. 해외 사례처럼 다중이용시설이나 거리 등에는 높이를 아예 5m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장의 안전대책도 문제였다. 천여 명이 모이는 행사임에도 안전통제 요원이 없었고, 사전에 소방서 등에 의한 시설안전 점검도 되지 않았다.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규제가 완화된 것도 그 배경이다. 안전관리 규정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에만 적용하도록 바뀐 이번 행사에는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통제선 설치 등이 강제될 수 없었다.

근시안적 발상들

이번 사고에 대해 환풍구에 올라간 개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이 난무하고, 보수언론은 판교 사고 유가족들이 빠르게 협상한 것을 두고 성숙한 자세라며 세월호 유가족이 배워야 한다는 등 망발을 일삼았다. 이 두 반응은 공통적으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고 개인의 책임과 보상문제로 관심을 돌려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가로막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바랄 뿐이다. 보수언론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지위를 깎아내려 이러한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다른 사고를 막으려면

우리는 반복되는 사고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서 시민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안전에 대한 권리 요구가 강화되어야 또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돌아본 국내외 대형사고의 역사와 교훈!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박상은 지음 | 사회운동 출판사

가격: 6,500원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삼풍백화점과 다를 수 있을까?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둘러싼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 들머리는 글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다시금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면 필독해야 할 책", "국내외 여러 참사들을 비교 분석하고,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들을 집요하게 분석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필독해야 할 책!"- 알라딘 100자평 중에서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신의료기술은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서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도입되는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위험한 로봇수술 부추기는 병원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수술이다. 얼마 전 보라매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할

때마다 교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로봇수술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기존 수술법보다 장점이 없는데 비해 가격만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병원의 탐욕적인 의료 장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금의 박근혜 정부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부분 적용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와 병원은 돈을 벌겠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비싸고 안전하지 못한 수술

을 받게 된다.

제약·의료자본 위한 규제완화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하나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신의료기술의 평가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예인 사망사고

에서 보듯이 의료기술은 무엇보다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줄기세포치료제 역시 이스라엘, 독일 등에서 암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는 위험한 신약이다.

규제완화 철회하라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 절차를 대폭 축소한다면 환자들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